

#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(Ⅰ)\*

권수진 연구위원 | 법학 박사, soojin@kicj.re.kr

박성훈 선임연구위원 | 사회학 박사, ngokr0102@kicj.re.kr

발행일 2024년 12월 17일 발행인 정웅석 발행처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

## 주요키워드

출소자, 출소예정자, 사회복귀, 사회정착, 재사회화, , 갱생보호,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민간 갱생보호시설

\* 관련보고서: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(Ⅰ)

- 교정시설 입소단계부터 사회복귀 준비
- 사회와의 연계, 사회적 처우 확대
- 교정시설과 사회와의 중간 완충지대(Halfway House) 마련, 필요적 중간처우 실시
-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독립 법률 제정
-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
- 전문인력 및 민간 자원 확보

## 01 |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

### 논의의 배경

- 자유형 집행의 목적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임.
- 이에 법무부 교정본부,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,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민간 갱생보호법인,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정착 지원 위해 다양한 법무보호복지(갱생보호) 서비스를 시행 중임. 이러한 관계기관의 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,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.
- 이 연구는 현행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 정책을 검토하여, 우리나라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, 전제조건,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,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효과 제고 및 출소자의 재범 방지, 안전 사회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.

## 02 | 주요 연구내용

### 우리나라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

- **출소 전 사회복귀 지원**
  - 법무부 교정본부 및 교정시설 : 교육과 교화프로그램(기본 교육, 외부통학, 위탁교육), 작업과 직업훈련, 사회적 처우(귀휴, 가족만남의 날 행사, 가족만남의 집 이용, 사회봉사 및 사회견학, 귀휴) 등 실시
- **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**
  -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,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민간 갱생보호시설 :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사업(숙식제공, 긴급지원, 기타 자립지원), 가족지원(주거지원, 가족희망, 학업지원, 결혼지원), 취업지원(직업훈련, 취업알선,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, 창업지원), 상담지원(사전상담, 심리상담, 사후관리 및 멘토링, 사회성 향상 교육) 등 실시

- **출소 앞둔 시점 출소 준비 및 계획**
  - 과거와 달라진 점 : 금주, 단약, 삶에 대한 태도 등 달라진 생각과 습관/ 부모님, 자녀 등 가족과 지인에 대한 미안함/ 재범 중단의 다짐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심리상담, 사회봉사, 신용회복 등 구체적인 계획/ 수감 이후 아버지의 사망, 자녀의 출산 등 가족의 변화된 상황과 나이듦에 대한 인식/ 반복되는 재범의 굴레 속에 출소 앞두고 여전히 느끼는 막막함
  - 출소 이후 구체적 계획 : 가족 만나 도움 요청/ 구직, 자격증 취득/ 주거 마련/ 재혼 준비/ 가족 도움받아 상담, 단약, 금주, 종교 활동 등
  - 가족과의 관계 : 관계 지속되는 가족은 주로 누나, 여동생 등 여자 형제 언급 많음. 가족관계 단절된 경우 대부분 잦은 재범과 오랜 수형생활로 가족뿐 아니라 친구, 동료 등 다른 사회적 유대도 크게 나빠진 상태
- **출소 이후 예상되는 우려 및 지원**
  - 출소 이후 가장 우려되는 점 : 주거·생계 우려/ 취업 우려/ 사회부적응 우려/ 출소 후 착용하게 될 전자발찌 우려/ 재범 우려
  - 출소 이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시선 :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는 참여자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참여자로 나뉨. 후자의 경우 사회적 낙인을 출소자 자신의 심리적 부담으로 여기거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불이익 없다고 평가절하
  - 출소자에게 필요한 지원 : 숙식지원/ 심리지원/ 취업지원/ 의료지원/ 청소년 출소자와 정신질환 출소자에 대한 지원
- **재범에 대한 인식**
  - 재범의 원인 : 생활고 등 경제적 문제/ 술, 낮은 자기통제나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와 같은 성격이나 기질/ 출소 이후 찾아오는 무료함과 외로움/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차별과 답답함
  - 재범예방 위해 중요한 점 : 부모, 아내, 자녀 등 가족의 도움/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가족 유대가 약한 경우 대안적 기능 수행할 수 있는 멘토의 도움/ 전문기관의 도움/ 출소자 스스로의 변화 의지(마음가짐)
- **출소자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**
  - 교정시설의 교육과 프로그램 : 일부 참여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, 다른 일부 참여자는 긍정적으로 인식
    - ▶ 긍정적 평가 : 다른 사람과 소통의 기회,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의 계기, 특히 심리교육과 인성교육에서 강사의 공감 능력에 만족도 높음.
    - ▶ 부정적 평가 : 평이한 내용, 강사의 준비 부족. 복역 기간에 따라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어려움, 배운 기술이나 취득한 자격증을 출소 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움.
  -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 : 출소 후 생활지원을 제공받고 있는 참여자들은 공단 지원에 대한 만족도 높음.
    - ▶ 긍정적 평가 : 공단 직원에 대한 신뢰, 공단 기반으로 삶의 계획 가능
    - ▶ 부정적 평가 : 사전상담 교육 내용 어렵고 전달 원활하지 않음. 심리상담 지원이 출소자에 맞추어져 있지 않음, 여성출소자에 대한 배려 부족, 생활시설의 느슨한 규율, 공단 활동의 홍보 부족

## 주요국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

- **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 마련**
    - 미국 “Second Chance Act”와 “First Step Act” / 독일 “재사회화법” / 일본 “재범방지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”
- ⇒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 마련으로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전문성 강화 및 효과 제고 기대

- **교정시설 입소단계부터 사회복귀 준비**
  - 독일 : 교정시설 구금 최소화 위해 개방형 집행의 활용도 높이고, 가능한 한 교정시설 외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출소자의 충격 완화. “전환관리”로 교정시설 입소단계부터 출소 후 사회복귀 위해 전문인력과 함께 개인별 적합한 처우 계획 작성 및 처우 프로그램 마련
  - ⇒ 교정시설 입소단계부터 사회복귀 계획수립 및 출소 준비 시작으로 사회복귀 효과 제고
- **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위한 전문인력 확충**
  - 독일 : 교정시설 입소단계부터 출소 후 어려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전문인력(사회복지사, 사회교육사, 채무상담사 등) 배치
  - 일본 : 형사시설 입소단계부터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위해 다양한 방안 진행
  - ⇒ 교정단계부터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전문가가 교정시설에 상주해 수형자의 출소 준비 지원하여 출소 후 사회정착 성공 가능성 제고
- **민간기관의 참여 및 협력기업의 확보**
  - 미국 :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위한 근거 법률에 의해 연방·주·지방 정부 외 민간기관에 상당한 재정 지원
  - 독일 : 민간에 의한 범죄자 지원 활발
  - 일본 : 출소자 고용하는 민간기업인 “협력 고용주”에게 세제 혜택 등의 다양한 혜택 제공
  - ⇒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위해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력기업의 확보 중요
- **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**
  - 미국 : 연방·주·지방 정부 및 민간 조직에 상당한 재정 지원,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
  - 일본 : 중앙정부가 출소자 재범방지 및 사회정착 지원 정책 수립,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면서 상호 협력과 지원
  - ⇒ 교정당국과 출소자 지원 부처, 사회복지부처, 고용노동부처 등 관계부처,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, 민간기관, 지역사회 간 연계·협력 필요

## 03 | 정책제언

###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: 더 일찍, 더 많이, 더 확실히

- **교정시설 입소 시부터 사회복귀 준비**
  - 출소예정자 대상 석방전교육(형기종료 약 2개월 전 15시간)의 교육시기 앞당기고 교육내용 보완
  -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예정자 대상 사전상담(출소 1개월 전부터 1시간)을 초기 교정단계부터 실시하여 수형자 사회복귀 준비 지원 체계 마련
- **사회와의 연계, 사회적 처우 확대**
  -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된 구금생활은 오히려 범죄자의 재사회화,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사회정착에 큰 장애가 됨. 특히, 장기수의 경우 가족, 사회와의 단절 기간이 긴 만큼 가족관계 회복,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더 많은 기회와 시간 필요
  - 사회와의 접촉 기회 늘릴 수 있도록 “사회적 처우” 확대 및 “중간처우시설” 확충으로 사회와 유사한 생활 유지 기회 제공
- **교정시설과 사회와의 중간 완충지대(Halfway House) 마련, 필요적 중간처우 실시**
  - 교정시설과 사회와의 중간 완충지대(Halfway House) 마련하여, 모든 수형자가 출소 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중간 완충지대에서 직장생활 등 사회 경험하다 출소하는 방안 고려

##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전제조건

- **근거 법령의 정비 : 독립 법률의 제정**
  - 현행 보호관찰법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에 관해 규정
  -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독립된 근거 법률 마련 필요 : 보호관찰과 법무보호복지의 법적성격 차이, 법무보호복지 업무의 정체성 재정립, 법무보호복지업무의 위상 제고,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전문성 확보,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제고, 법무보호업무의 유기적 민관협력관계 구축
- **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**
  -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출소자 재범방지업무 추진기반 조성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
  - 교정본부와 교정시설,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, 보호관찰과,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민간 갱생보호법인, 고용노동부, 보건복지부, 지방자치단체, 지역사회 간의 협조 필요
- **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관련 전문인력 확보**
  - 교정직 공무원의 주된 업무는 교정시설 내 수형자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수형자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에 한계 있음
  -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직원과 함께 사전 교육받은 자원봉사자 활용 중임
  -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출소자 사회복귀 및 사회정착 지원 위해 법률자문, 경제자문, 의료자문, 생활자문, 심리상담 등 출소(예정)자들의 수요 반영한 전문인력 확보 필요
- **민간 자원 확보**
  - 교정시설과 민간 자원과의 연계로 참여도 향상 및 효과 제고 기대
  - 출소자 고용기업에 인센티브 제공, 모범수 출소자에 대한 국가 보증 및 보험 등 활용해 출소자 고용 협력기업 확보 필요

##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

- **교정시설 교육 등 개선**
  - 인성교육 확대 및 질적 관리
  - 석방전교육 내실화
    - ▶ 석방전교육의 교육시기 앞당기고, 교육내용 보완
    - ▶ 중간처우와 연계, 지역사회 또는 개방시설과의 연계 방안 고려
  - 직업훈련제도 개선
    - ▶ 출소자의 근로 의식 고취, 현실 상황 충분히 이해시키려는 노력
    - ▶ 취업 동기 또는 근로 의식 높은 수용자 선별
    - ▶ 출소 후 관련 분야 취업 및 고용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
  - 작업장려금 활성화
    - ▶ 작업장려금은 수형자 출소 후 사회정착 위한 생활 준비금으로서 중요
    - ▶ 작업장려금 모아 출소 후 생활에 도움 되도록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교정시설 생산 물품(교도작업 물품) 우선 구매 제도화 방안 고려
    - ▶ 출소 이후 일정 기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려금의 점진적 상향

- **법무보호 서비스 개선**

- 사전상담 개선

- ▶ 사전상담 위한 별도의 시간과 장소 마련
- ▶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이 일정 시간 교정시설에 상주하며 사전상담 실시하는 방안 고려
- ▶ 집단상담 참여 출소자 대부분이 남성 중심이므로, 여성 출소자에 대한 배려 필요

-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

- ▶ 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: 사전상담 → 출소 후 본인 신청 → 심사 → 법무보호 서비스 지원
- ▶ 온라인화 : 다른 사회서비스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법무보호 서비스의 온라인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점진적 전환
- ▶ 간소화 : 최소한의 서류만 구비하여 신속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

- 심리상담 개선(전문인력 확충)

- ▶ 수요가 높아지는 심리상담에 대한 출소자의 욕구 충족시키고 온전한 치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확충

- 임의적 서비스 개선

- ▶ 고위험군 또는 필요성 인정되는 출소자에게 부분적이거나 필요적 법무보호 서비스로 적용하는 방안 고려
- ▶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 서비스 지원 필요 대상자에게 자원과 서비스 집중

## 04 | 정책 기대효과

### 예상 파급력

-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사회정착 지원 정책 효과 제고
-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시스템 구축
-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성공적인 사회정착 실현
-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재범률 감소, 안전사회 확립